

농가 실익을 바탕으로 정부정책 뒷받침



▲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장

1987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1988 제 23회 기술고등고시
 1997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4~2008 농림부 초지사료과/축산경영과(양계)
 축산정책과(개량, 관리)/축산경영과(한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개량평가 과장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장
 서울대 농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국내 축산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자 절감 방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농가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이 촉구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장으로 부임한 노수현 서기관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축산학도 출신

노수현 팀장은 1987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면서 1988년 제23회 기술고등고시를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농산물검사소를 거쳐 농림부 초지사료과, 축산정책과(개량, 관리·기금), 축산경영과(양계, 한우)에서 각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개량평가 과장으로 지냈고, 본회 검정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양계에 대한 경험과 애착을 토대로 올해 3월 새 정부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장으로 부임했다.

양계를 비롯해 한우육성, 양돈, 낙농, 사료를 총괄하는 축산경영팀은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주

된 업무이고, 대내외 대응책 마련에 24시가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지난달 6일 공식취임한 장태평 신임장관은 농수축산업도 성장산업, 첨단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포부를 내세우면서, “시장 개방화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생산비 절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지적에 따라 축산경영팀에서도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집약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 추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생산성 향상 방안 시급

축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생산성 향상 대책마련이라고 말하는 노 팀장은 앞으로 사료비 절감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주고, 농가, 관련 기관, 연구소, 전문 컨설턴트는 자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문제로 업계 전체가 모여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다. 또한 “경쟁력은 생산성에서 나온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강화되어 컨설팅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중장기 수급정보, 관측정보를 통한 경영안정화가 추진되어 보다 농가 경영의 소득안정화를 기대한다고 전한다.

배합사료 업무 전담

노수현 팀장은 축산경영팀에서 전 축종을 총괄하면서 배합사료 업무까지 맡고 있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날 토론자로 노 팀장은 사료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농가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할당·양허관세 적용 확대 △원료 구매방식 개선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추

진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지원에 대해 추진한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는 무관세 적용 품목을 당초 3품목(옥수수, 매니옥펠렛, 대두)에서 14품목(대두박, 겉보리, 면실박, 밀기울 등)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연간 1,188억원의 지원효과를 보게 될 것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4일 대통령 직 인수위에서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축산농가의 사료외상 구매 이자(연 12~24%)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5조원을 한시 특별지원(연리 1%, 상환기간 2년 분할)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가 앞으로도 지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사료곡물 수요적 확보를 위해 사료원료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해외사료 곡물 재배농장 지원을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보다 사료값 안정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한다.

소득 안정 직불제로 국내 농가 안정화 추진

세계적으로 FTA, DDA 등 무역장벽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값싼 축산물이 과잉수입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국내 농가의 피해 보전 대책으로 ‘소득 안정 직불제’를 내놓았다. 당해년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품목별 수입량이 105% 이상 수입될 경우, 과거 5개년 평균 조수입의 80% 이하의 기준조수입이 감소될 경우 차액의 85%를 피해 보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육계와 산란계를 포함해 한우·육우(비육우)·돼지(비육돈)가 이에 적용되며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앞으로 수입산물 증가, 과잉생산 등에 대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노 팀장은 “업계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소득안정과 세계와의 싸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한다. (정리 | 장성영 기자)